

고용통계 왜곡 초래하는 세금주도 일자리의 문제점과 대책

2021. 8. 25

오 정 근

자유시장연구원장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



오정근의 쏙쏙경제

취재수첩

성상훈 기자

정치부



“문재인 정부에서 근로자의 삶의 질은 개선됐고, 코로나19 전까지 역대 최고 수준의 고용률을 달성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일자리 정책 성과와 관련해 국회에 내놓은 답변이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일자리위원회에서 받은 ‘2020년까지의 문재인 정부 일자리 창출 성과’ 보고서에서다. 일자리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 “일자리 창출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며 야심차게 청와대에 일자리상황관까지 설치한 그 위원회다.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2019년까지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지원,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및 재정 일자리를 통해 가시적 성과를 도출했다”고 강조했다. 이후 코로나19 때문에 성과가 가려졌다는 설명이다.

이는 전문가든 물론 편의점 아르바

역대 최대 성과? ... ‘자화자찬’한 일자리위원회

트생까지 국민 대부분이 동의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소득주도성장으로 일자리 한파가 얼마나 심각했으며, 재정투입 ‘공공 알바(아르바이트)’자리는 얼마나 허접한 자리인지 눈으로 봤기 때문이다. 이들이 마주한 일자리는 대부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위한 디지털 인재 양성 사업처럼 거창한 이름은 달렸지만 출근해 할 일이 없어

플타임 고용률 뚝뚝 떨어지는데
일자리쫓 “코로나前엔 최고 달성”

익 공부를 하는 6개월짜리 인턴이나, 형광색 조끼를 입고 반나절 담소를 나누다 집으로 돌아가는 ‘노인 일자리’였다. 차라리 현금 지급성 복지라고 부를 순 있어도 위원회의 말처럼 삶의 질을 개선한 일자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역대 최고’라고 자화자찬하는 고용률도 사실 재정투입 단기 일자리로 만들어진 일종의 ‘통계 분식’이라고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지적한다. 실제 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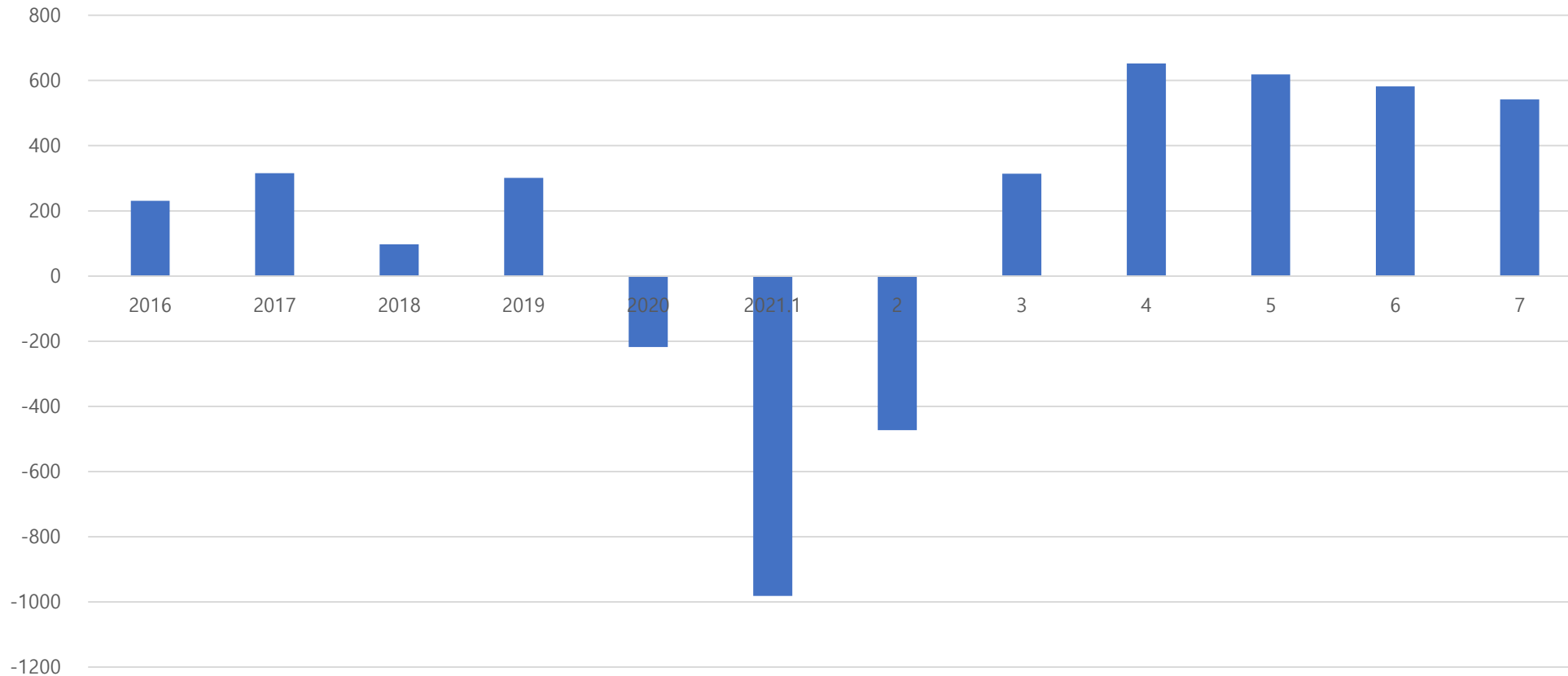
계로도 확인된다. 통계청장 출신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산출한 주 40시간 이상 일하는 플타임 일자리 고용률은 2017년 65.1%에서 2018년 63%, 2019년 62%, 2020년 58.6%로 가파르게 떨어졌다. ‘양질의 일자리’는 코로나19와 관계없이 매년 빠르게 사라진 셈이다.

일자리위원회는 정작 단기 일자리나 재정 지원 일자리가 얼마나 되는지, 취업준비생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는 어느 정도 있는지는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국회의 현황 파악 자료 요구에 일자리위원회는 “구체적인 추진과 현황 파악은 고용부와 기획재정부에서 하고 우리는 심의·조정하는 기구”라고 답했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상황판’은 4년 사이 조소의 대상으로 바뀌었다. 규제 완화, 신산업 육성 등 근본적인 해결책 대신 재정투입 단기 일자리 같은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정책으로만 일관해온 탓이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 누구도 동의하기 어려운 자화자찬을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와 일자리위원회만 홀로 탄나라에 살고 있는 건 아닌지 묻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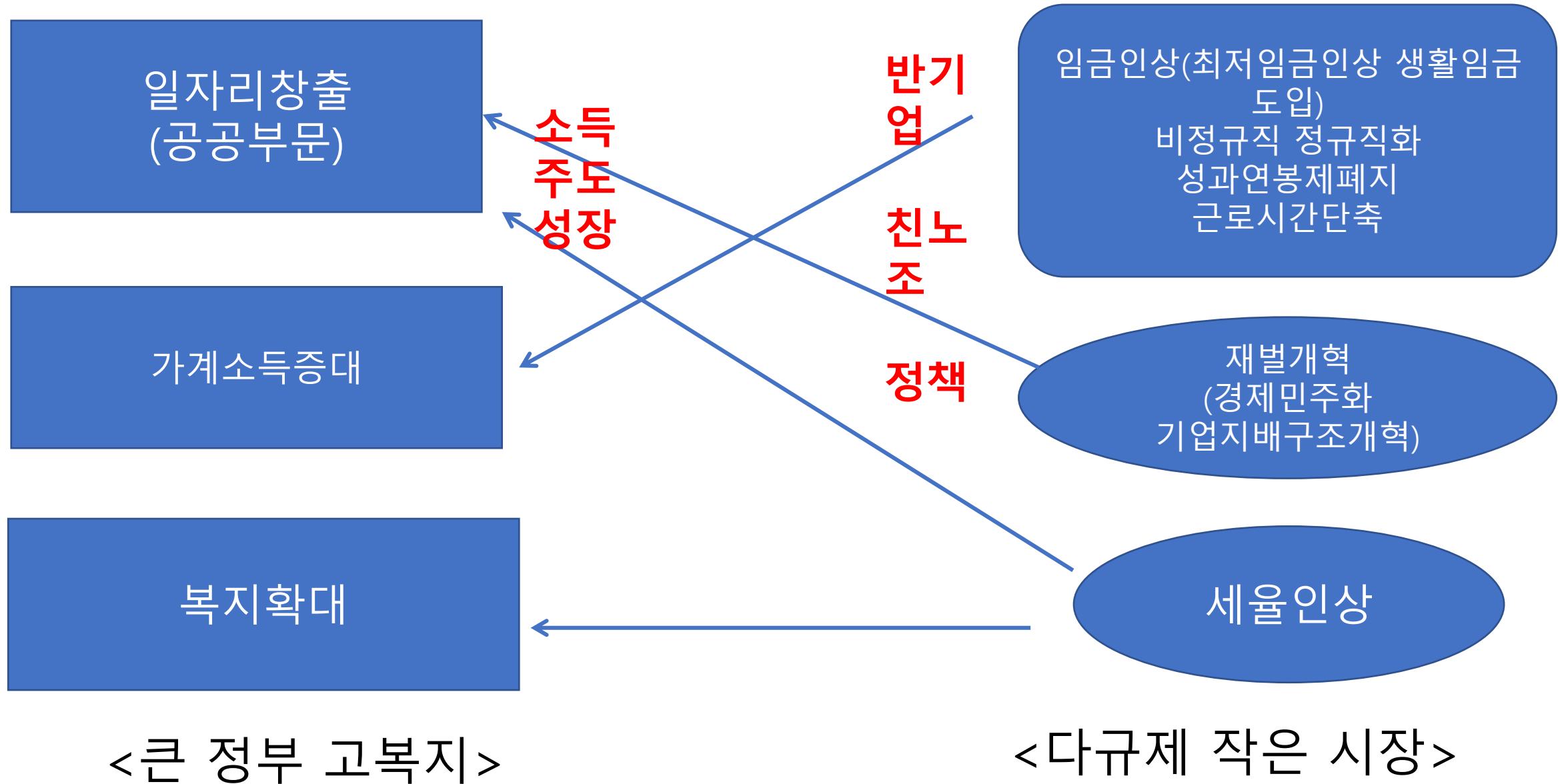
플타임일자리
2017: 65.1%
2020: 58.6%

연월별 취업자증감 (전년동기비, 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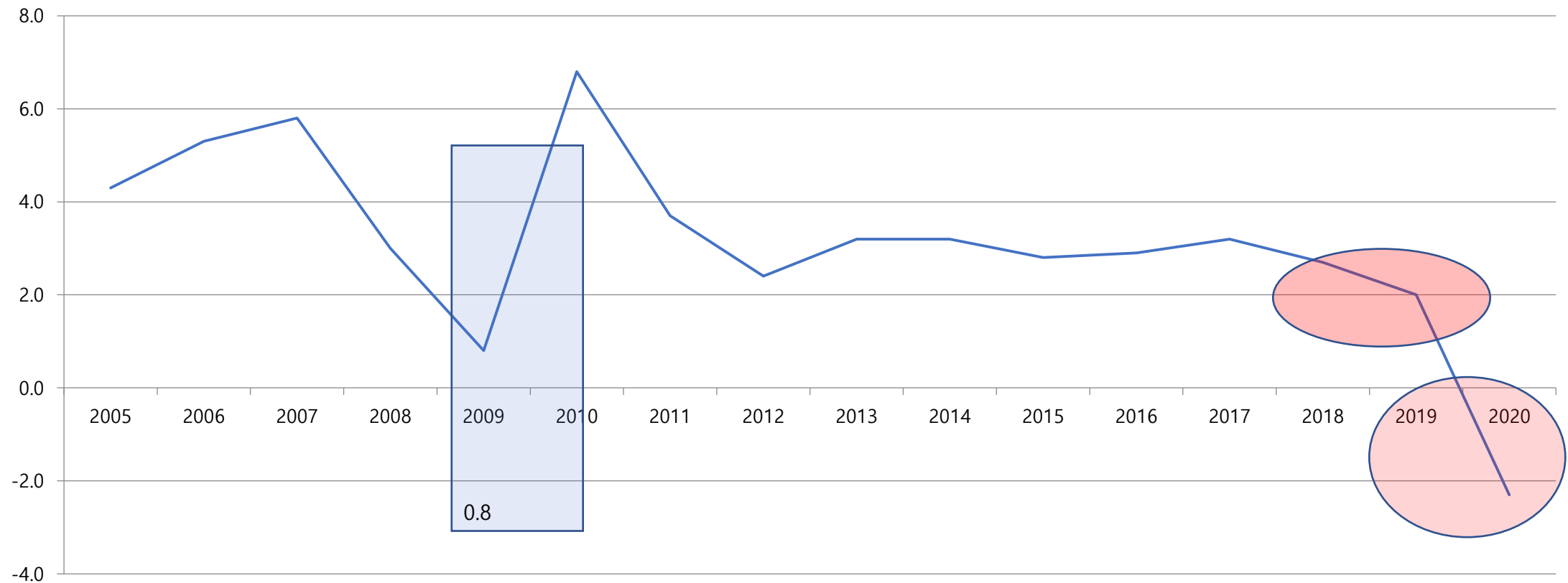
지난 정부에서 매년 평균 30~40만 명 증가해 오던 취업자 증가폭도 2018년에는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등 무리한 소득주도성장의 파장으로 9만7천 명으로 대폭 줄었다. 2019년 들어서는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증가폭이 평균 22만 명으로 증가했으나 기저효과를 감안하면 고용사정 악화 지속했다. 문정부는 고용사정이 심각해지자 세금주도 단기일자리를 양산하기 시작했다

일자리 파괴하는 문재인정부 좌파 사회주의형 경제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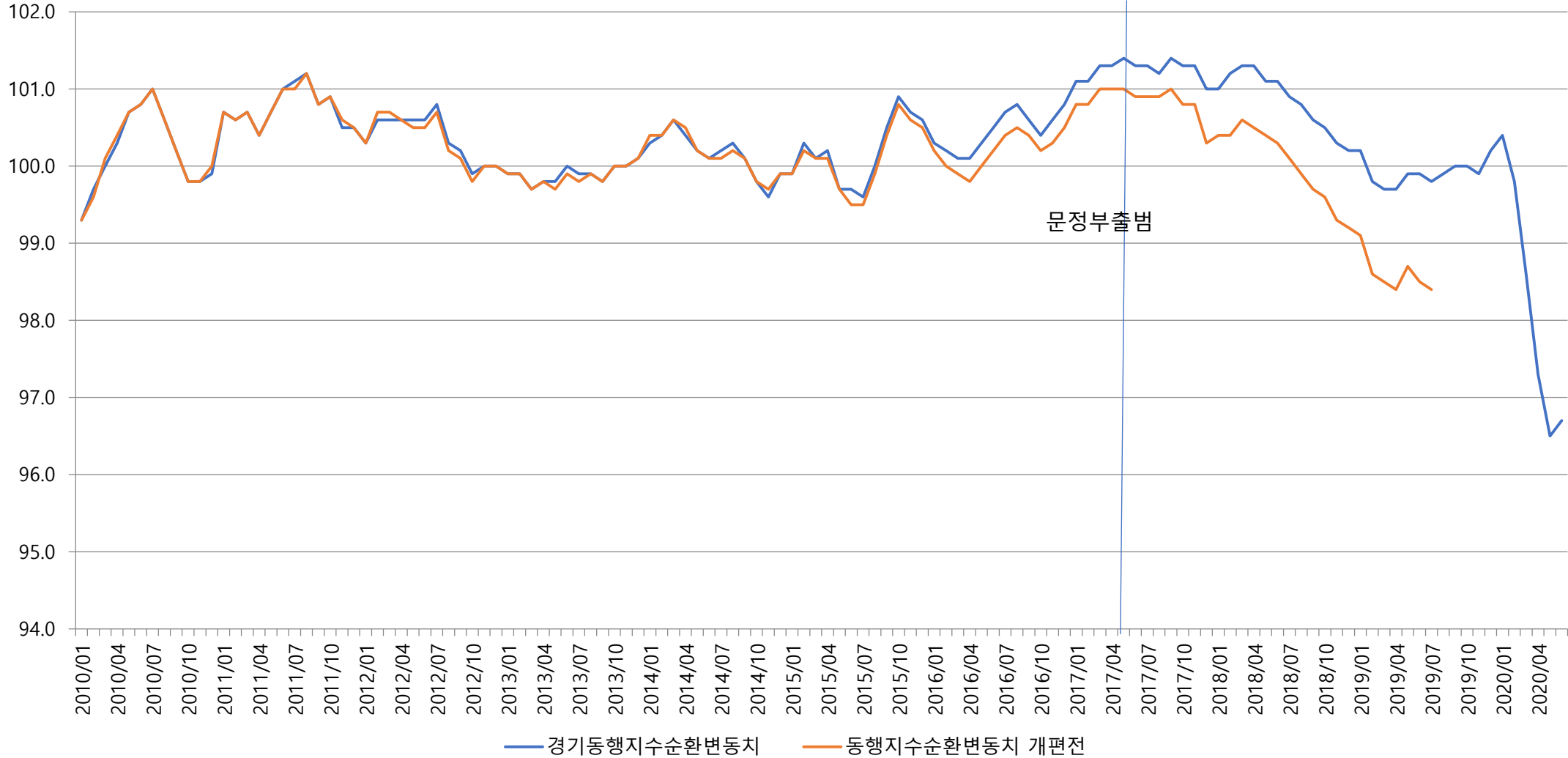


문재인 불황 => 코로나 이후 대불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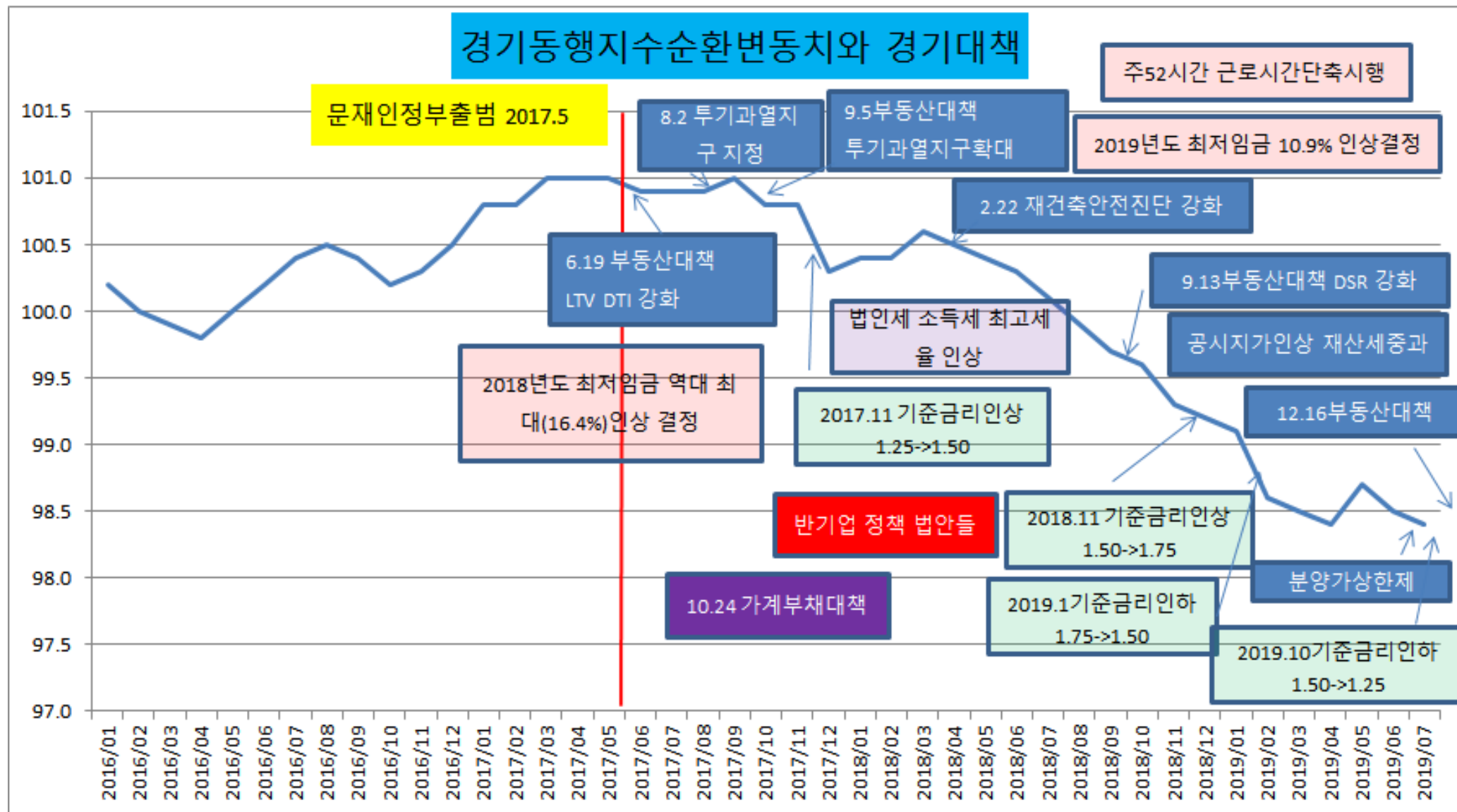
경제성장률(%)



문정부 3년 동안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위기수준 추락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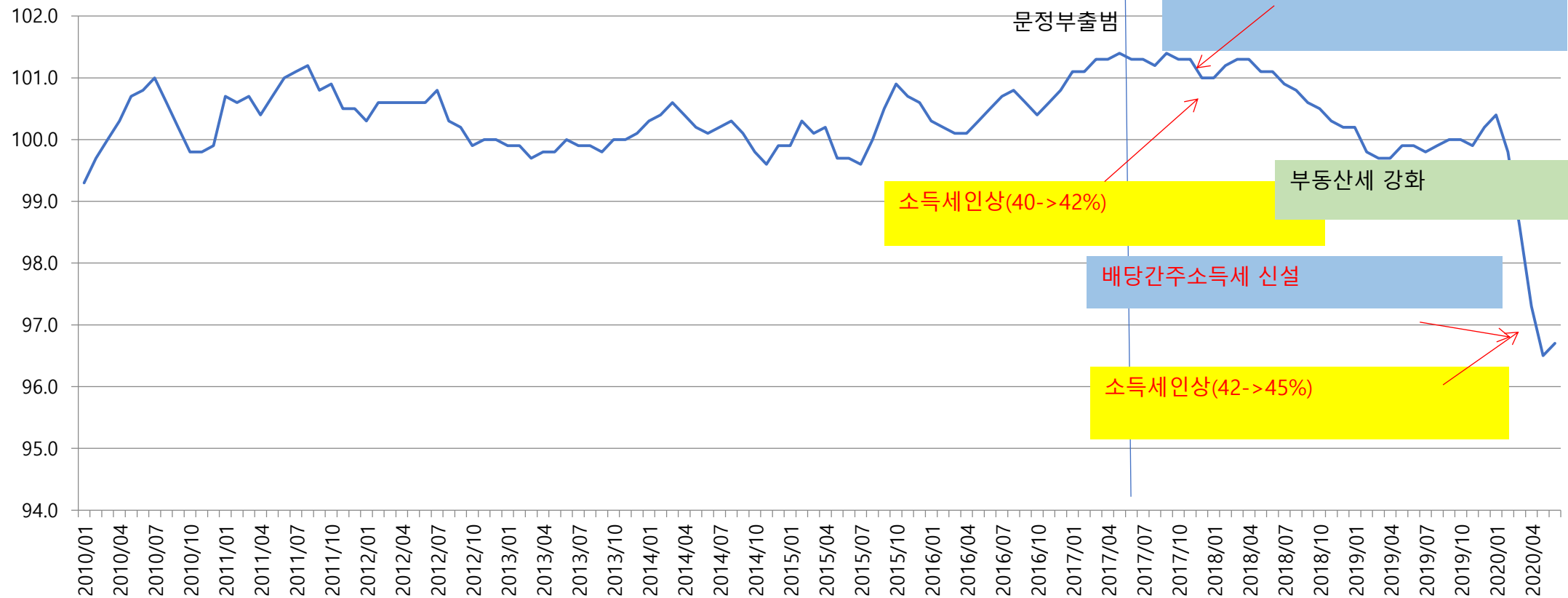


거꾸로 간 文정부 경기안정화 대책과 일자리파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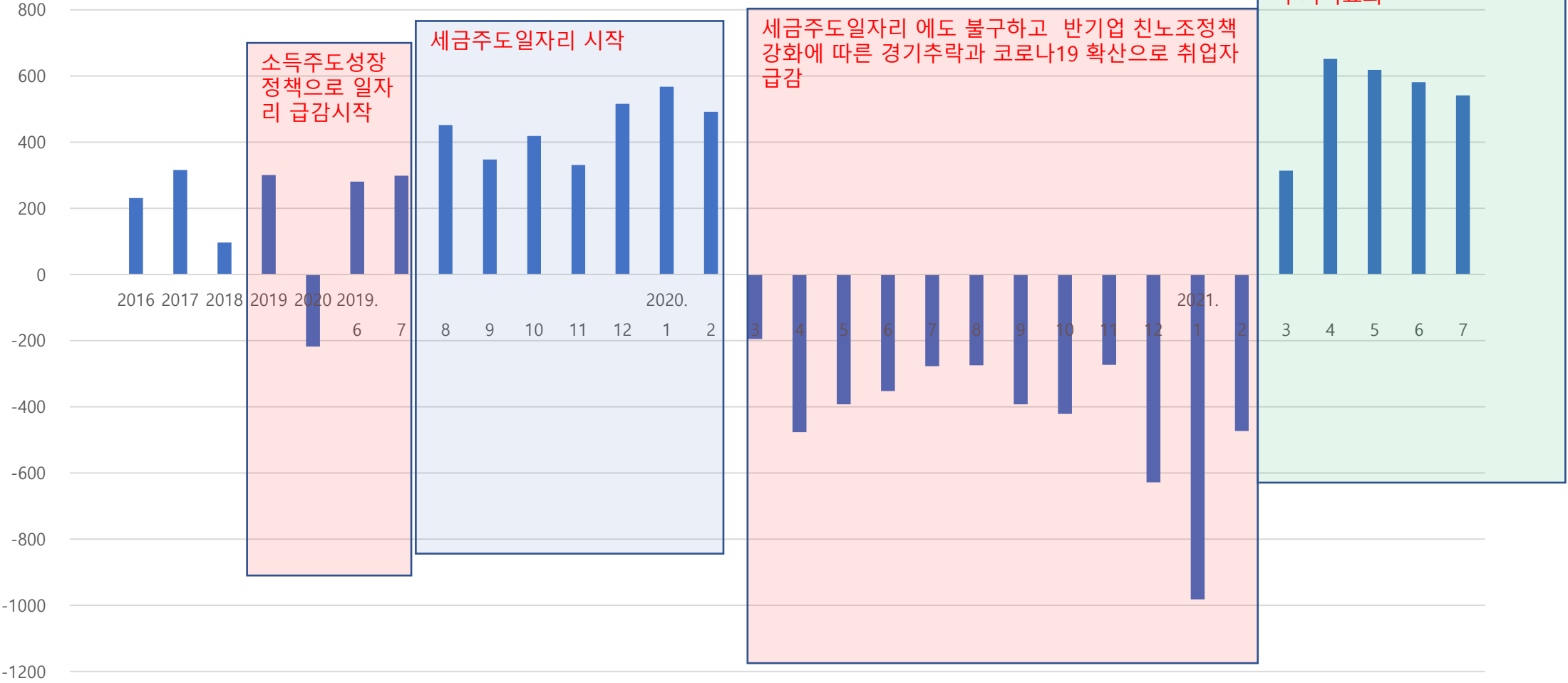


경기침체 불구 서울인상만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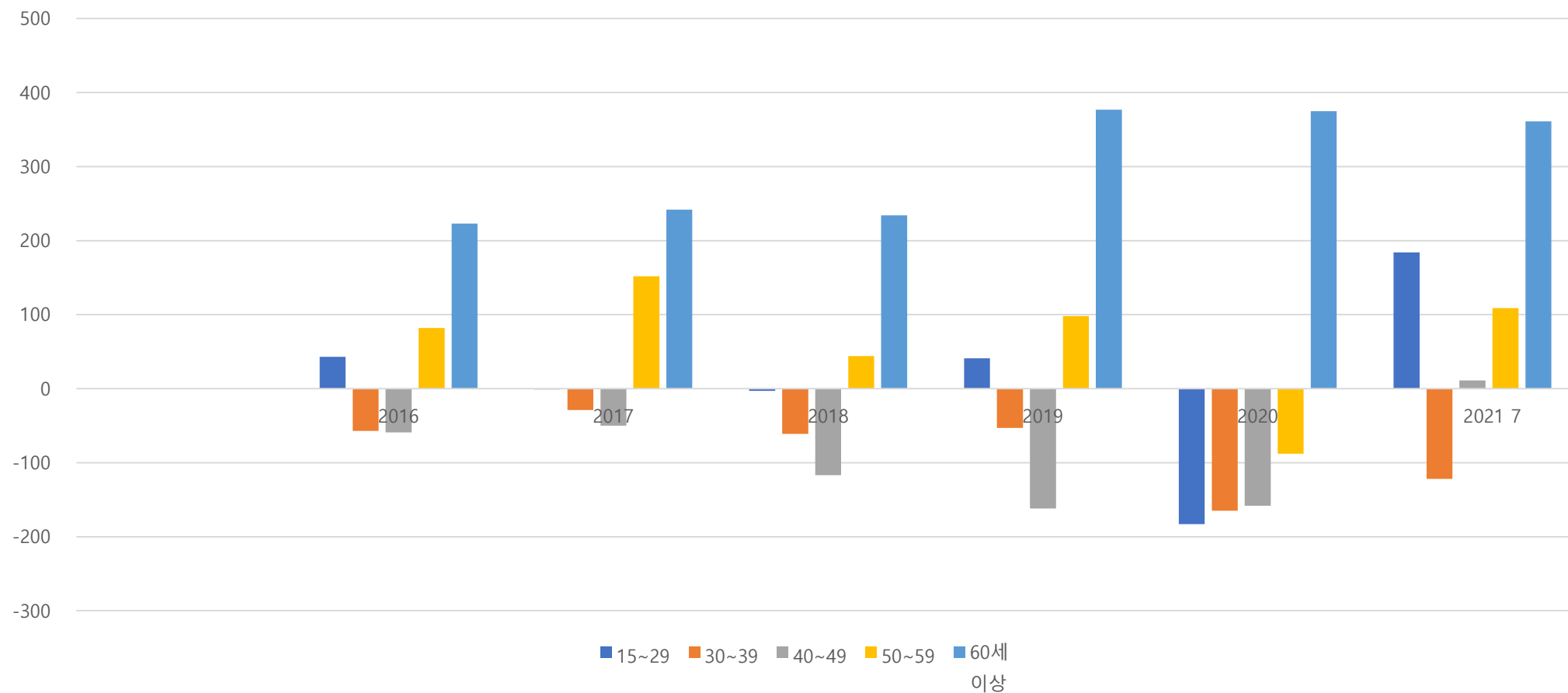
경기동행지수순환변동치와 서울



연월별 취업자증감(전년동기비, 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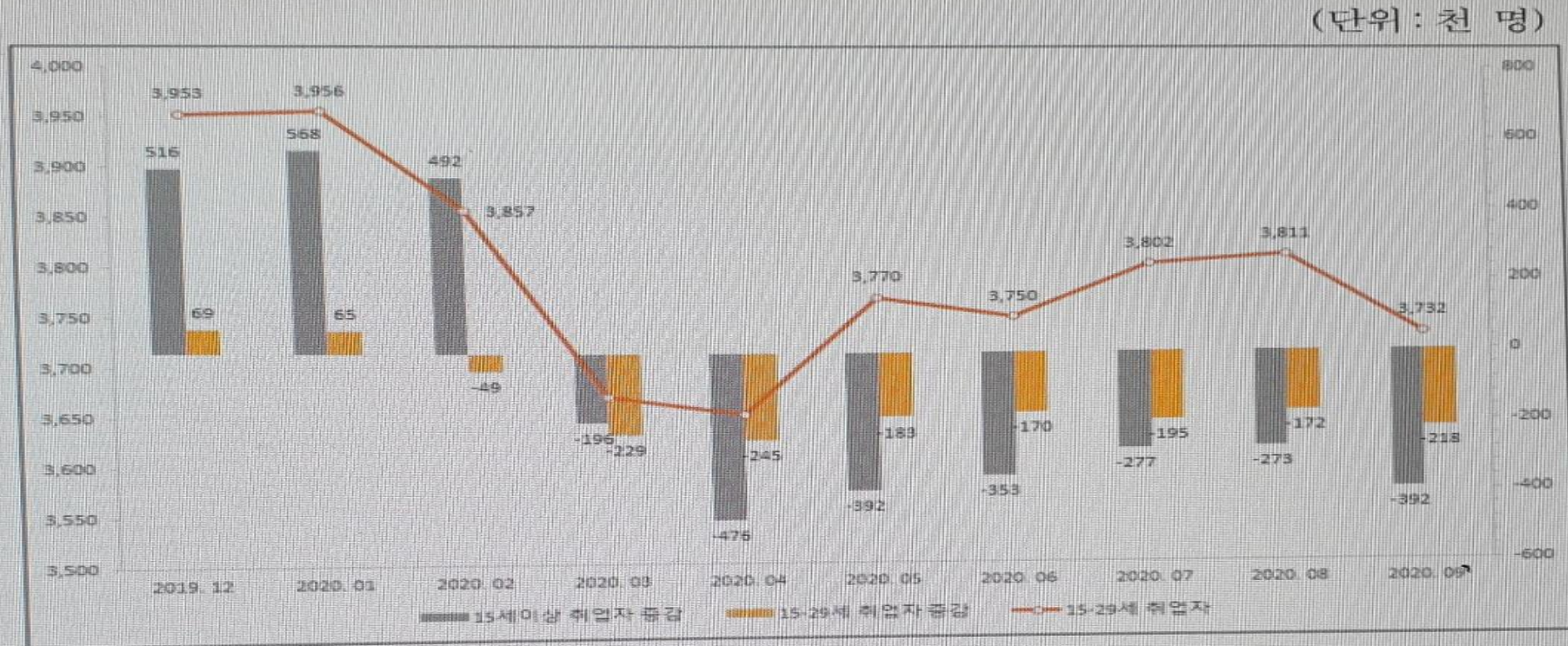
연령별 취업자 증감(전년동기비, 천명)



전체 일자리 증가의 95%(평균 21만명)가 65세 이상으로 대부분 재정지출에 의한 초단기 일자리였다. 경제의 허리인 40대 일자리는 여전히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청년층의 일자리도 2020년 코로나의 영향으로 급감해 코로나로 인한 타격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년층이 최저임금인상 주52시간제도도입 비정규직정규직화 코로나확산으로 일자리타격을 가장 많이 받는 모습

[그림 2-3] 청년층 취업자 수 및 증감 변화추이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자료: 청년층 일자리 현황과 변화전망, 한국노동연구원, 2020.3

청년층은 주로 단기 알바 중심으로 일자리 증가

< 고용 형태별 청년층 취업자 비중 추이> < 청년층 취업자 비중 감소 산업〔'13대비〕>



* 각주 : 전체 취업자 = 임금근로자(정규직 + 비정규직) + 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 등)

*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8월) 원자료, 각 연도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산업 현장에서 사라지는 청년 정규직, 고용 규제 완화 해야, 2021. 4

청년 고용구조 (2021.7 현재, 만명)

청년 (15-29세) 인구	876.6	비고
경제활동참가	429.5	참가율 49%
취업	398.5	
(정규직)	65.5	취업자의 16.4%
(비정규직)	333.2	
실업	30.8	실업률 7.2%
쉬었음	39.9	
구직단념	26.7	전연령 63.3만
확장실업률(%)	22.7	199.0만

8000억 뿌려 청년 단기일자리 11만개 만드는 정부

- 정부가 나랏돈 8000억원을 들여 민간에서 단기 일자리 11만개를 만든다. 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면 최대 6개월까지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최악의 청년 실업난이 발생하자 급한 불을 끄기 위해 내놓은 해법이다.

2020. 7. 30일 고용노동부는 이날부터 민간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과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참여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는 6만개 창출을 목표로 예산 5611억원이 투입된다.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은 2352억원 규모로 일자리 5만개를 만들 계획이다.

두 사업 모두 청년(만 15~34세)을 신규 채용하려는 근로자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벤처기업, 청년창업기업, 성장유망업종 등 일부 기업은 근로자 1~4인 기업도 신청 가능하다.

"문재인 정부, 단기 청년 일자리 2배 증가...눈속임 불과해"(송석준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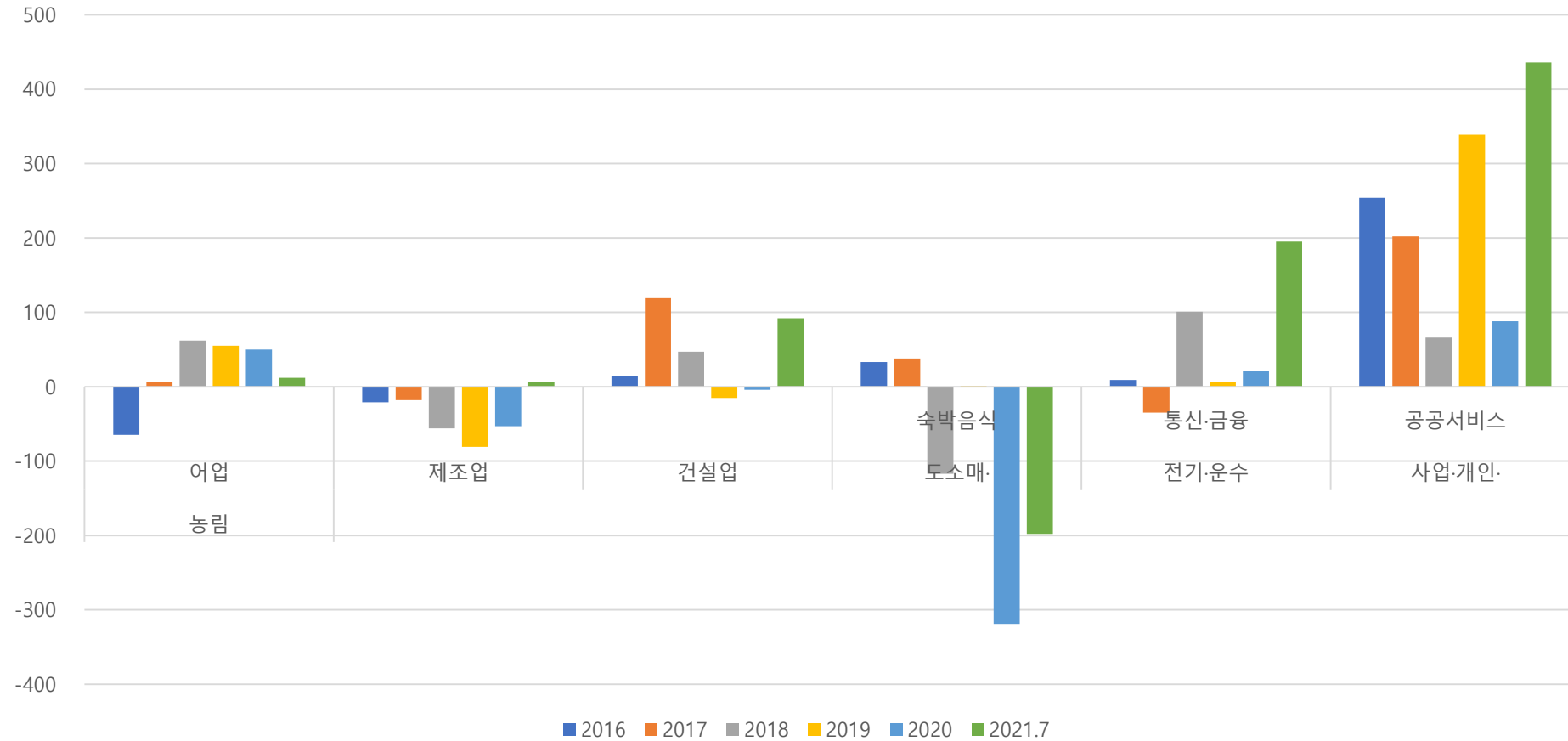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단기알바 정권별 채용 인원 및 정규직 전환 현황

(단위: 명, ()정규직 전환인원)

구 분	기관명	이명박 정권 (2008.3~2013.2)	박근혜 정권 (2013.3~2017.3)	문재인 정권 (2017.5~현재)
1	한국철도공사*	0(0)	0(0)	1,850(0)
2	한국도로공사	0(0)	0(0)	712(0)
3	한국토지주택공사	1,229(0)	1,518(0)	3,061(0)
4	한국시설안전공단	14(0)	40(0)	187(0)
5	한국교통안전공단	66(0)	691(0)	1,237(0)
6	코레일테크	3(0)	3(0)	37(0)
7	주택도시보증공사	28(0)	9(0)	24(0)
8	국가철도공단	69(0)	8(0)	20(0)
9	한국공항공사	344(0)	504(0)	428(0)
10	인천국제공항공사	270(0)	612(0)	198(0)
11	코레일 네트워크	135(0)	162(0)	120(0)
12	코레일 유통	2,762(0)	3,608(0)	3,103(0)
13	한국감정원	1,453(0)	1,764(0)	1,733(0)
계		6,373	8,919	12,710

*철도공사의 2016년 파업대체 단기채용 2,078명 131억15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나 파업으로 인한 비상인력 투입으로 기관 정상 운영시의 단기인력 채용과는 달라 통계산출에서 제외

산업별 취업자증감 (전년동기비, 천명)



산업별로도 정부의 재정지원에 의한 공공서비스 일자리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양질의 제조업 일자리는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재정지원 일자리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취업취약계층 등의 고용창출과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 행정기관 등이 재정을 활용하여 시행하는 일자리 사업을 의미
- 직접일자리, 고용장려금, 고용서비스, 실업소득 유지·지원, 직업훈련, 창업지원 등 6개 분야로 구분
- 2020년의 경우 24개 부처·청에서 총 166개 사업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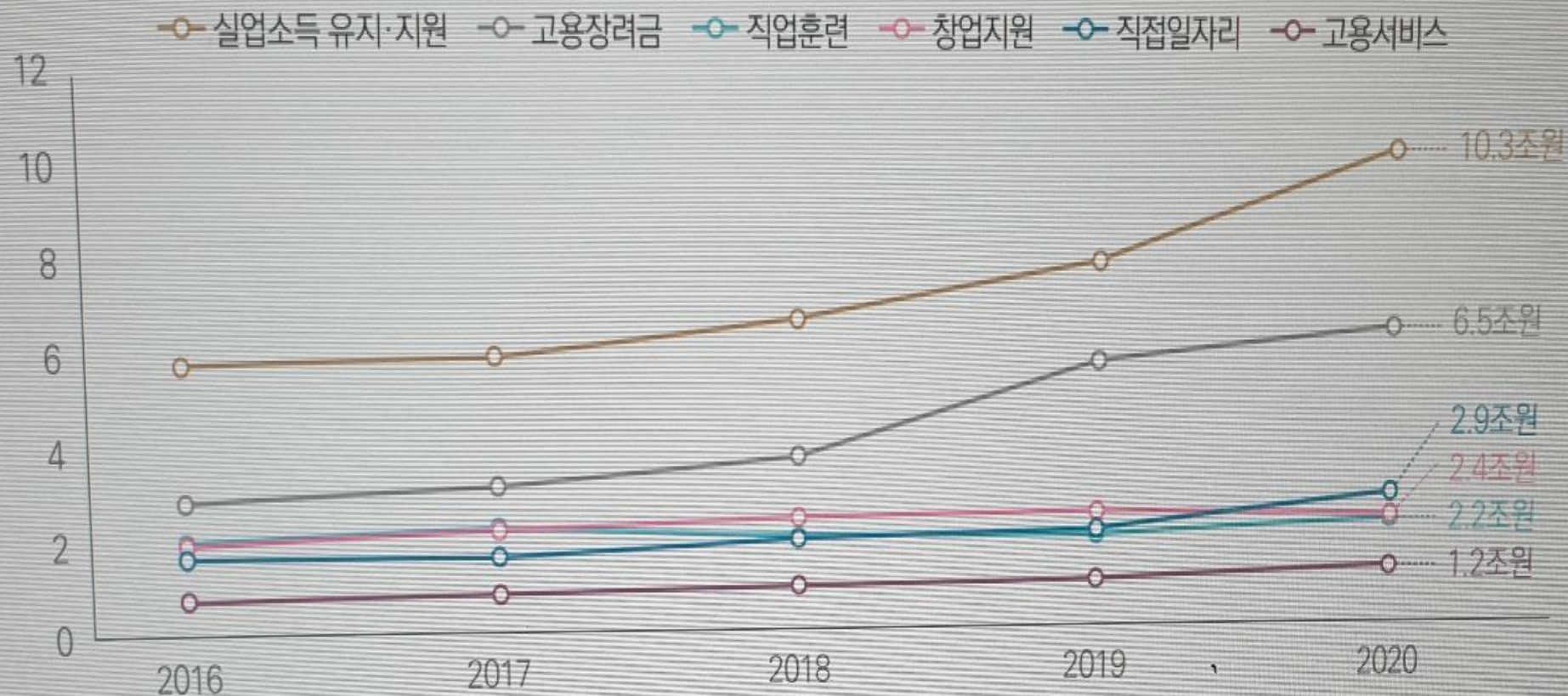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유형별 주요 내용 및 예시사업

- **직접일자리:** 취업취약계층의 취업지원·소득보조를 위해 정부가 한시적·경과적 일자리를 제공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복지부)
- **고용장려금**
보조금: 취업취약계층의 채용촉진, 실직위험 재직자의 계속고용지원, 근로자의 고용안정 등을 목적으로 지원되는
 -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부)
- **고용서비스:** 취업알선, 직업상담 및 진로지도, 노동시장 정보제공 등을 통하여 구직자의 직업탐색과 고용주의 인력 확보를 지원
 - 취업성공패키지지원 (고용부)
- **실업소득 유지·지원:** 실업보험, 취업촉진수당, 체당금 지급,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등 공적 자금으로 실직자의 임금 보전을 지원
 - 구직급여 (고용부)
- **직업훈련:** 실업자의 취업 및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의 실업위험 감소를 위해 직무능력 향상 훈련을 제공
 - 내일배움카드 (고용부)
- **창업지원:** 실업자 등 취업취약계층이 창업을 통해 노동시장에 진입하도록 현금·융자·시설·컨설팅 등을 제공
 - 창업기업자금 (중기부)

2020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

- 2019년 대비 4.3조원 증가한 **25.5조원**으로, 전년대비 20.1% 상승
- 유형별 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실업소득 유지·지원(10.3조원), 고용장려금(6.5조원), 직접 일자리(2.9조원)**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2019년 대비 증가 규모는 실업소득 유지·지원이 2.4조원(30.7%)으로 가장 크고, 그 뒤로 직접 일자리(0.8조원, 37.6%), 고용장려금(0.7조원, 12.2%) 순임2

[그림 3]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유형별 예산규모 추이('16~'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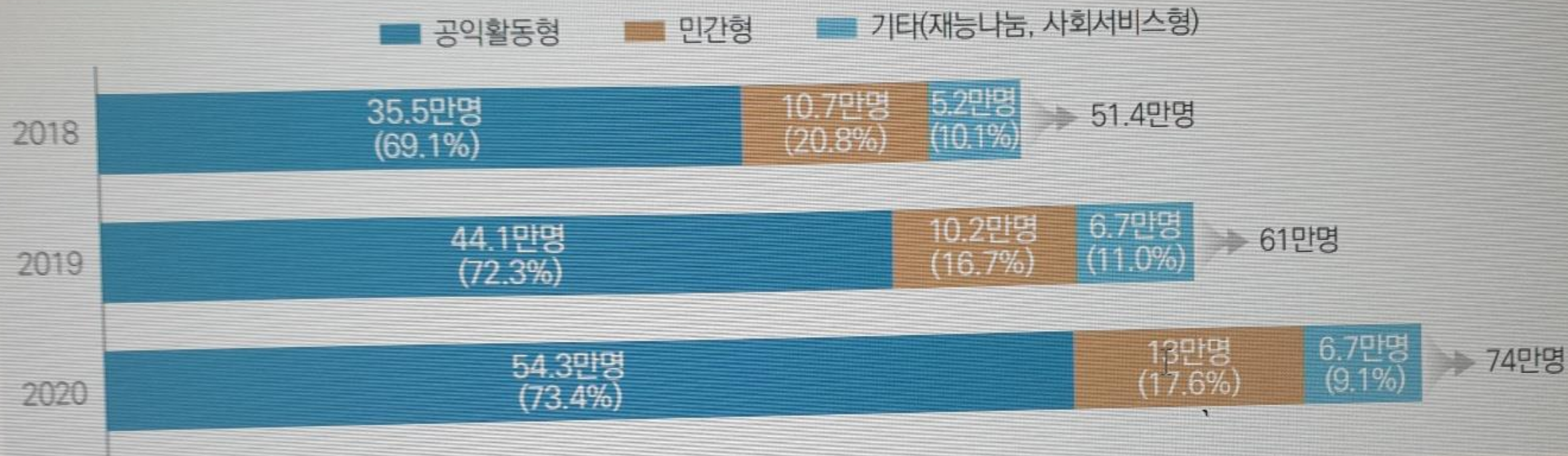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최근 고용 동향 및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분석, 2020. 2

(직접일자리)

노인 공익활동형 일자리를 중심으로 노인 직접일자리 확충

- 2020년 노인일자리 계획인원 **74만명** 중
 - 54.3만명(73.4%)은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공익활동형 일자리'로, 취약노인 생활지원, 공공시설 봉사 등 수행
 - 노인일자리 유형: ① '공익활동형', ② 민간 노동수요에 따라 고용이 창출되는 '민간형'(13만명), ③ 노인의 자격·경력을 상담·학습지도 등에 활용하는 '재능나눔'(3만명), ④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노인인력을 활용하는 '사회서비스형'(3.7만명)

[그림 4] 노인일자리 유형별 비중('18~'20년)



주: 본예산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및 보건복지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고용장려금)

청년 고용장려금 및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 확대 등에 따른 고용장려금 예산 규모 및 비중 증가

- 인건비 직접 지원을 통해 고용창출을 유도하는 고용장려금 사업의 비중이 최근 가장 높게 증가(4.5%p)하고,
- 간접적으로 구직자의 취업·창업을 지원하는 직업훈련($\Delta 2.6\%$ p) 및 창업 지원($\Delta 4.4\%$ p) 유형의 비중은 감소
- 청년 취업 지원 사업(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및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육아휴직 급여 등) 등 규모 확대

최저임금 올린 뒤 세금으로 달래는 정부

일자리안정자금 연장 논란

올해끝으로 폐지 검토했지만
최저임금 상승, 물가 웃돌자
靑·정부, 소상공인 지원나서

내년 예산 고작 4000억원
직원 1명당 1만원 받는셈

문재인정부가 임기 마지막 해까지 최저임금을 가파르게 올린 보완 조치로 내년에도 최저임금 상승 보완책인 '일자리안정자금'을 유지하기로 했다. 당초 올해까지만 집행하고 폐지할 방침이었지만 최근 내년도 최저임금을 5.1% 올리기로 한 뒤 민심이 싸늘해지고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상공인 불만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그러나 관련 예산이 너무 적어 임금 인상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할뿐더러 임금은 임금대로 올린 뒤 세금으로 지원하는 '병 주고 약 주는 임시처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22일 복수의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을 내년에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보완 대책으로 직원 30명이 안 되는 기업과 소상공인 등에게 직원 월급 일부를 세금으로 직접 지원한다.



2018년 최저임금이 16.4% 급격히 오르면서 영세 소상공인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시작됐다.

정부는 당시 이 사업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지원 금액도 지속적으로 줄여왔다. 직원 5명 이상 사업장 기준으로 직원 1명당 13만원이던 지원금은 지난해 9만원으로, 올해는 5만원으로 축소됐다. 관련 예산도 2018년 2조9737억원, 2019년 2조9173억원, 2020년 2조6611억원에서 올해 1조2966억원으로 급감했다. 지난해 결정된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역대 최저(1.5%) 수준으로 정해지면서 예산 규모도 줄어든 것이다.

실제 고용부는 지난 5월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 요구 대상에서 이 사업을 제외한 바 있다. 고용부 관계자들도 최근까지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은 올해를 마지막으로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왔다. 그러나 내년도 최저임금 상승률이 올해 물가상승률 잠정치(1.8%)의 2.8배를 웃도는 5.1%로 확정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장기화하면서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속출하자 '병 주고 약 주기'식 대응책을 마련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영세 자영업자들 표심을 모으기 위해 사실상 실효성도 없이 사업만 유지한다는 지적을 제기한다. 한 국회 관계자는 "한국 노동시장의 40% 가까이를 자영업자가 차지하고 있다"며 "보조금으로 지지를 호소하겠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제는 현재 내년도 일자리안정자금으로 가용한 예산 규모가 4000억~4500억원 수준으로 실제 집행되더라도 지원금으로서 효과가 미미하다는 점이다. 국회 관계자는 "추계 결과 예

산이 4000억원이면 직원 1인당 한 달에 1만~2만원을 지원받게 된다"며 "세금을 쓰고도 육먹을 수준인데 왜 이 사업을 고집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실효성 없는 보여주기식 행정의 전형이라는 취지다.

고용부는 이 같은 지적에 대비해 사업 운영 기간을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되면 직원 한 사람당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금 규모가 1년 단위 대비 2배로 늘어난다. 또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끝난 직후 일자리안정자금 사업도 종료된다. 사업 기간 단축 여부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했다.

최저임금은 현 정권 집권 초반 2년간 29%나 올랐지만, 전체 임기를 보면 연평균 7.2% 수준이다. 이렇다 보니 전문가들과 정부 일각에서는 "임기 초반에 최저임금을 급등시키지 않았다면 애초 이런 사업이 필요 없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보조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되는 것이 핵심인데,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은 사전에 정교하게 디자인된 사업이 아니었다"며 "실효성을 판단할 데이터조차 비공개 상태이기 때문에 조속히 사라져야 할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김희래 기자

(실업소득 유지·지원)

구직급여 지출 증가 등으로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정의 적자 규모 확대

-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정 지출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구직급여 지출의 증가로, 실업급여 계정의 재정수지는 2018년 적자로 전환되었고 2019년에는 1.4조원 적자 기록
- 구직급여 지급자 수: ('16)120만명 → ('17)120만명 → ('18)132만명 → ('19)144만명 → ('20)137만명(계획)
- 2019.10.1.부터 구직급여의 지급기간이 연장되고(90~240일 → 120~270일), 지급액도 인상 (평균임금의 50% → 60%)⁶⁾ 됨에 따라, 향후 지출 증가 지속 가능성

고용보험기금

- 고용보험기금은 실업급여계정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계정의 2개 계정으로 분리·운용
- 이 중 실업급여계정에서는 구직급여 등 실업급여사업과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사업을 수행

[그림 5]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계정 지출('16~'20년)



주: 2016~2019년은 결산 기준이고, 2020년은 기금운용계획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림 6]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계정 재정수지('16~'20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최근 고용 동향 및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분석, 2020. 2

고용보험기금 올 3.2조 적자 예상

정부 “고용보험료율 인상 등 검토”
이달말 재정건전화 대책에 포함 주목

실업급여(구직급여) 재원인 고용보험 기금이 연말이 되면 3조 2,000억 원 규모의 적자를 낼 것으로 전망됐다. 이르면 이달 말 발표되는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 대책에 고용보험료율 인상안까지 담길지 관심이 쏠린다.

김성호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고용보험제도개선 태스크포스가 마련 중인 재정건전화 방안은 이달 말 또는 내달 초 발표될 것”이라며 “고용보험료율 인상을 비롯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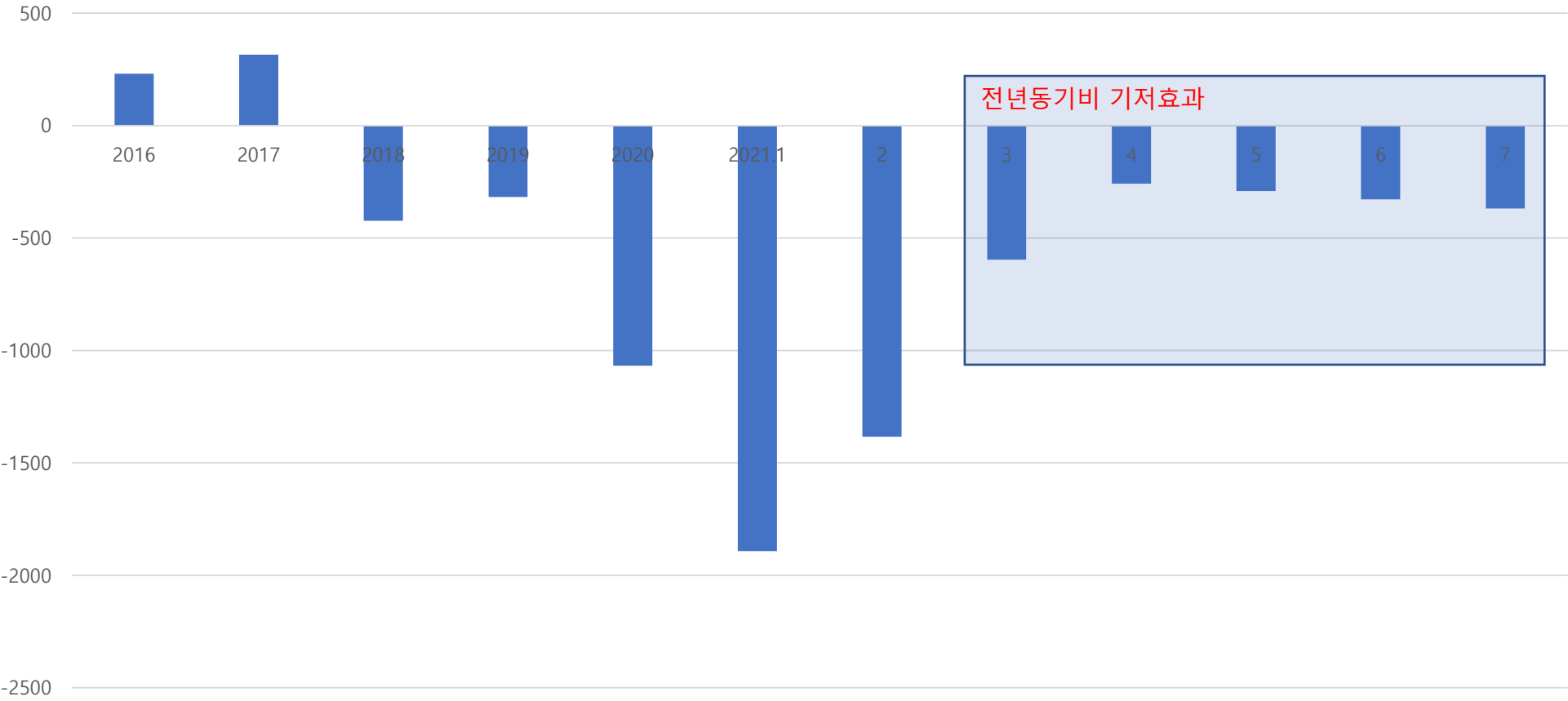
1995년 도입된 고용보험기금의 현재 보험료율은 1.6%다. 실업급여 재원으로 쓰이는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화 방안이 추진된 이유는 기금의 재정난 때문이다. 실업급여뿐만 아니라 고용지원 사업에 쓰인 고용보험기금 올해 적립금은 4조 7,000억 원이 남는다. 하지만 작년과 올해 벌린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7조 7,000억 원을 제외하면 실재는 마이너스 3조 2,000억 원이 적자다.

고용부는 고용보험기금 고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60세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일자리함께하기설비투자융자 폐지를 비롯해 2019년부터 4개 사업구조조정을 했다. 기금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7개 사업을 이관해 비용 2,115억원을 조정했다. 또 2조 2,000억원 규모의 정부재정인 전입금도 기금에 투입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실업급여 매월 지급액이 1조원을 웃도는 상황 등을 맞아 추가로 재정건전화 대책을 내놓게 됐다.

만일 재정건전화 대책을 통해 보험료율 인상이 이뤄지면 2019년 10월 1.3%에서 1.6%로 인상된 이후 2년 만이다. 제도 도입 이후 0.6%로 결정된 보험료율 인상은 큰 위기를 맞았을 시점에 단행됐다.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위기 이듬해 0.6%에서 1%, 2008년 금융위기가 온 후 3년 뒤인 2011년 4월 0.9%에서 1.1%로 올랐다. 보험료율 인상이 반복되는 것과 관련해 김 정책관은 “2019년 1.6%로 인상된 이후 코로나19 사태가 터지지 않았다면 고용보험기금 건전성은 현재처럼 악화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양종곤 기자 gg11@sedaily.com

연월별 순취업자증감 추정 (천명, 전년동기비)



순취업자증감=취업자증감-재정지원노인단기일자리-재정지원청년단기일자리

대 책

- 기본적으로 반기업규제와 과도한 친노조정책과 노동개혁, 법인세 인하 등으로 기업투자환경 개선해 세금내는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
 - 규제혁파
 - 노동유연성 제고
 - 세금쓰는 재정주도 일자리에서 세금내는 민간 양질 일자리로
- 유턴기업에 대한 보다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으로 국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대 책

- 노인 구직자가 장기적으로 양질의 지속가능한 **민간형 노인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일자리 발굴 및 매칭을 위한 정부의 노력 필요
- 노인이 근무하기 적합한 직종·직무의 개발 및 보급, 재취업 의사가 있는 노인에게 고용 서비스 강화 필요
- 노장년에 대한 **탄력적 최저임금제** 적용
- **고용장려금 사업의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직업훈련·고용서비스 등 노동 시장의 미스매치를 해결할 수 있는 유형의 사업을 강화할 필요
- 고용장려금 유형의 예산 확대 추세를 고려하여 사업 성과를 점검하고 고용장려금 및 사업 관련 재정투입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민간의 일자리 매칭 및 창출 지원 등을 통해 노동시장의 역량 강화 필요
- **구직급여 지출구조에 대한 종합적 검토** 등 고용보험 재정수지 관리 강화 방안 마련 필요
- 실업자의 생계유지와 구직욕구 저하 최소화를 조화시킬 수 있는 구직급여 지급 기·간·대상, 소득대체율 및 지급 상·하한액, 조기 재취업시 인센티브 등 종합적 검토 필요
- **근로촉진형 구직급여제도 도입**